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신설의 법적 함의 고찰

A Study on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New Article 34-8 of the Higher Education Act to Resolve Education Inequality

노 성(Noh, Su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new laws to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to the people who want to receive education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differential compensation differentially applied to the selection of college student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lso stipulates that they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in education due to social status, economic status, or physical conditions. Nevertheless, social mobility is retreating due to polarization in Korean society, and the function of the class ladder in education is gradually weakening.

Accordingly, universities have established a new law to provide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of opportunities to apply for social conside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basic living recipients, and to exp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by more than a certain percentage.

This social integration screening legislation is a measure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ies, and as the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Higher Education Act was deliberated and resolved at the State Council on February 22, 2022.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s expected to expand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for econom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students who have been relatively difficult to enter college.

Key words: Article 34-8 of the Higher Education Act, Social integration screening, The principle of differential compensation, The regional balance screening, Social consideration targets, The selected opportunity, admission process, Resolving educational inequality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입학처 특임교수, 법학박사

I. 서론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에서 고른기회입학전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10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이 개선안에서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라는 별도 과제를 신설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고 대학구성원의 다양성을 통한 사회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구성원 다양화 지표’를 개발·공시하고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¹⁾

이후 교육부는 균등한 고등교육 제공을 위해 ‘2023학년도 대학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학이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원대학 모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형의 선발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사회기여자 후손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자, 소년소녀가장, 산업재해자 등 특별전형을 활성화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활성화 한다.

둘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기존의 3%에서 4%로 확대하고 특수교육대상자 등 정원의 특별전형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발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있게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을 유도한다.

정부의 이와 같은 계획으로 1996년도 입학전형의 2% 이내로 처음 도입되었던 농어촌 특별전형은 1997년에 3%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정원의 전형에서 4% 수준으로 선발하도록 확대되었다. 또한, 2009년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기회균형 특별전형이 도입되었고²⁾,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른기회입학전형은 대학의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1) 교육인적자원부(2004.10.28.).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2)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70627000227>, 김덕준 기자, 부산일보 2009.01.11.일자 인터넷 기사 참조(검색일: 2022.5.23.). 정부가 발표한 대학입시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해 ‘가난해도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미 고교생의 82%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진학률을 더 높이게 돼 모든 인적 자원이 대학으로 몰리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도 제기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대학총학장들 간 토론회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밝힌 기회균등할당제는, 그동안 농어촌 실업계고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돼 온 정원의 특별전형을 2009학년도부터 형식을 바꾸고 선발비율을 3.9%에서 11%로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위한 전형으로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생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전형방법이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³⁾에 따라 수도권 소재 대학들에 지역균형 특별전형이 도입되는 데 대체로 학교장추천 전형을 선발한다. 지역균형 특별전형은 이전 연도에 실시된 학교장추천전형이나 혹은 추천전형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이 변형된 사례도 있고, 새로 신설된 경우도 있는데 교육부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사회배려대상자와 지역학생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위한 일환으로 전체 선발인원의 10% 이상을 의무 선발해야 한다. 이렇듯 앞으로 수도권 대학의 기회균형과 지역균형 특별전형의 모집인원 확대는 계속될 것이다.

2024학년도 이전에는⁴⁾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확대를 위해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고른기회전형’의 선발 대상(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인재, 만학도, 특성화고 졸업자 및 재직자, 서해5도학생)을 별도로 정하여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예고하고 있다.

〈고른기회특별전형(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비율 추이〉

(단위: 명, 2022.4.20. 기준)

구분	정원내	정원외	합계
2023학년도	31,027(8.9%)	24,252(6.9%)	55,279(15.8%)
2022학년도	29,103(8.4%)	24,443(7.1%)	53,546(15.5%)
2021학년도	23,344(6.7%)	24,262(7.0%)	47,606(13.7%)
2020학년도	22,442(6.5%)	23,885(6.9%)	46,327(13.3%)
2019학년도	19,337(5.5%)	24,034(6.9%)	43,371(12.4%)

〈지역균형 특별전형 실시 대학〉⁵⁾

(단위: 명, 2022.4.20. 기준)

구분	실시 대학(개)	모집인원(명)		증감	
		2022	2021	인원(명)	비율(%)
서울	26	8,559	5,754	2,805	48.7
인천	3	895	259	636	245.6
경기	11	1,905	1,037	868	83.7
합계	40	11,359	7,050	4,309	61.1

3) 교육부(2019.11.28. 보도자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주요 요지는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 강화 및 대학 평가의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의 도입 등).

4) 2024학년도 이후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6에 ‘사회통합전형’의 선발대상(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자 및 재직자, 서해5도학생, 보호종료청소년, 북한이탈주민, 기타 대입전형기본사항에서 정하는 사람(만학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5)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2020), 대학입시와 진로·진학 설계, 30면.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으로 지역 범위를 6개 권역으로 유지하면서 일반 모집단위 인원의 확대와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간호계열 의무 선발비율을 40%로 규정함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실시 대학〉

(단위: 명, 2022.4.20. 기준)

구분	대학수	모집인원	총 모집인원 대비 비율
2023학년도	93개교	21,235	6.1%
2022학년도	92개교	20,793	6.0%
2021학년도	86개교	16,521	4.8%
2020학년도	83개교	16,127	4.6%
2019학년도	81개교	13,299	3.8%

여기서 차등적 보상의 원칙(affirmative action, 역차별 정책)이란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다양한 전형유형을 설정하여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전형과 다르게 일반전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교육목표의 경험적 성취라는 교육적 준거를 충족시킨다는 이유에서 특별전형은 선발의 교육적 준거와는 무관하게 교육외적 요인에 의한 교육상의 불이익을 보상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것이다.⁶⁾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인 초등교육과정을 통해 누적된 교육기회와 결과의 불평등을 보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따라서 고른기회입학전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가정환경과 본인의 열악한 교육여건 하에서 발생한 낮은 학업성취도, 교육적 불이익을 대학입학 기회의 우선적 부여로 보상하는데 의의가 있다.⁸⁾

이제봉(2009)⁹⁾에 따르면, 고른기회입학전형은 첫째,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교육조건의 평등, 교육결과의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정 하에서 실시된다. 다시 말해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다.

6) 교육부 보도자료(2021.12.30.), 기회균형선발의 대상은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대상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7) 적극적 평등조치인 역차별 정책은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피차별 집단(소수 불이익 집단)의 손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행위로서 진정한 평등, 즉 결과적 평등이 실현될때까지 그 특정집단에 우선적 처우와 기회를 보장하게 된다(김성기,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발전적 이해, 대학교육, 1997, 68면).

8) McDonough, P. M. (1998). Structuring college opportunities. In C. A. Torres and T. R. Mitchell(eds.). *Sociology of Education: Emerging Perspectives*. Albany: SUNY Press.

9) 이제봉, 대학교육에서 기회균형선발제의 근거와 쟁점, 교육실천연구 제8집1호, 2009, 129-13면.

둘째, 고른 기회 입학 전형은 보상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육평등의 개념에는 교육 결과의 평등이 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이 배제된 기계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회의 평등이 주어진다고 해도 어느 사회에서나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들을 위해 일정정도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에서의 보상교육의 실현은 입학과정에서의 배려와 사후관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른기회입학전형은 대학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해준다. 이 전형을 통해 다양한 집단의 통합을 도모하게 해주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와 부합한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학교를 통해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는 원리이다. 우리 사회의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전문계 학생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집단 선발을 통한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목적도 있다.

넷째, 고른기회입학전형은 영구적이 아닌 한시적 성격을 지닌다. 다양성 확보, 결과의 평등, 불평등 완화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해도 이는 한시적이어야 하며 일정기간 이후에는 이런 정책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학생의 낮은 학업성취도가 개인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불이익을 보상하여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사회통합전형 신설의 법제 검토 및 국회 법률안별 발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본 후, 교육격차해소를 완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신설에 따른 법제 검토

국가는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국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 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 이동성이 후퇴하고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계층 이동의 고착화 및 교육격차는 개인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10) 김철민 의원 등13인이 제2108635(2021.3.8.) 제385회 국회(임시회) 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 유발, 사회통합의 저해 등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자 모든 대학에게 해당 대상자의 정원을 따로 두고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오히려 일부 대학에서는 지난 10년 전보다 해당 대상자의 고등기회 제공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학의 자발적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이라는 대학의 공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회복하도록 하는 입법적인 구체화가 필요하다.¹¹⁾

이에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대학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정한 일정 비율 이상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제34조의8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대학입시에서 사회통합전형이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이 법제화¹²⁾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대학 모집인원, 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기회균형선발비율”이라 한다)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제34조의5제4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8의 신설(2021.9.24.), 시행(2022.3.1.)으로 기존에는 지원자격이나 선발인원에 대한 별도의 법령없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지만, 2022년 2월 22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해진 의무사항¹³⁾을 준수해야 한다.

- 11)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인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1992.10.1. 선고 92헌마68,76(병합)).
- 12)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1.12.28.(화)부터 2022.1.17.(월)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배려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장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2021.9.24.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었다.
- 13) 법률의 위임한계와 대학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 현황 및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을 10%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개정안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대학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역인재(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를 선발하려는 경우 기회균형선발 의무 모집비율의 절반인 5%까지를 지역인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헌법으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함과 평생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함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과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란 헌법상의 원칙과 부합하기 위해서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31조 제1항의 취지를 결합하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¹⁴⁾

또한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위한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교육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된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시설과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고른기회입학전형 정원내 전형은 사회공헌자전형, 그리고 정원외에서 정원내로 편입된 전형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공헌자전형은 유공자나 전쟁참가자 등과 관련된 본인 또는 손자녀나 국가안보·공안직 계통에 종사하는 공무원 가족들을 위한 전형이다.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자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본인이나 참가자의 자녀, 월남전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가족, 순직 군인·경찰공무원, 15~20년 이상 군·경에서 복무한 사람의 자녀 등이 대상자다.

정원내 고른기회입학전형은 2014년 10월 확정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정원외 고른기회입학전형에서 선발하는 사회적 약자를 정원내에서도 선발하도록 권장

14) 교육기본법에서 학습권으로 제시하고 있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는 바로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취지인 잠재력 및 소질 등을 가진 인재 선발과 직결되는 규정이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교육기회균등 원칙은 현행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가 추진되고 있는 주된 법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함에 따라 일부대학은 정원외 전형 지원자격 중 일부를 정원내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를 선발하도록 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5학년도 전형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전형 역시 정원내 고른기회 전형으로 볼 수 있다. 2015학년도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의대·치대·한 의대, 약대 등 상위권 모집단위에 대해 정원의 30%를 정원내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토록 권장하면서 정원내 고른기회전형의 선발인원 범위는 넓어졌다.

기존 고른기회입학전형 정원외전형 지원자격 유형은 7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 각 대학이 운영하는 모집단위와 관련한 전문계 교과를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특성화고(전문계고)출신자 전형,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산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인 학생들을 선발하는 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도시지역과의 교육격차가 큰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농어촌학생 전형,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터민전형, 장애인과 같이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전형, 대청해전 연평해전 등 북한 경비정 도발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대청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일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서해5도 특별전형 등이다.

고른기회입학전형 정원외 전형 기회균등전형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¹⁵⁾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등) 제2항 제14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목은 ‘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의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졸업자(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졸업자가 이수한 학과와 동일 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만 해당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이라 한다)를 졸업한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정

15) 교육에서의 기회균형선발제를 “역사적 차별을 당하는 집단에 속한 개인의 교육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Mickelson, R. (2002: 29). Affirmative action in education. In D. Levinson et al., Education and sociology: an encyclopedia (pp. 29~42). New York: Routledge Falmer).

한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정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2항에서는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서 사회 통념적 가치 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고른기회 입학전형 지원자격의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과 전형운영에 있어서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제1항에서 정하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입학전형(기회균형선발)의 대상을, 제1호 국가보훈대상자, 제2호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 제3호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3년 이상), 제4호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제6호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 제7호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정하는 자로 제1항의 각 호로 정하였다.

위와 같이 기회균형선발의 대상은 대입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제1항에서 정하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구분을 각 호로 정하였다.

Ⅲ. 법률안별 내용 개관 및 검토

1. 제17대(2004~2008) 국회 발의 법률안

의안명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안	2005-08-29	이주호의원등 23인	제17대 제255회
교육격차해소법안	2006-02-21	이인영의원등 27인	제17대 제258회

(1) 목적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은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교

육과 관련된 학교별, 지역별 여건과 환경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확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법안이 제안되었다.

(2) 주요 내용

이주호(안) 제4조는 교육격차 실태조사 및 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격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¹⁶⁾ 제5조에서는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 내용과 활용에 대한 평가가 불명확하다. 또한 제7조(지역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지역교육발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점에서 법률안의 실효성이 문제되었다.

반면, 이인영(안)은 제1조에서 말하는 교육은 국민에게는 누구에게나 국가차원의 균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나, 가정·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기회의 형평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바,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교육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여건¹⁷⁾이 마련되도록 하려는데 취지가 있었다. 하지만 제2조 제1호 교육의 “양·질적 차이”는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려는 작업이 법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법률의 해석·집행상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며, 제13조 제1항 교육격차를 교육의 양과 질의 차이로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3) 의안 처리 결과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교육격차 해소 대책에 대한 목적성은 인정되었으나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수립·시행을 위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여 두 법안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16) 교육위원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2006.9.26.).

17) 교육위원회, 교육격차 해소 법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2006.9.26.). 학교교육 여건과 지역사회 여건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실효성 확보, 입법 실현가능성(legalfesibility)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을 중심에 놓고 학교교육 여건으로 한정하든가, 지역사회 여건 중에서 학생들의 학습격차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들을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 이명균).

2. 제18대(2008~2012) 국회 발의 법률안

의안명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교육격차해소법안	2008-12-05	임해규의원등 10인	제18대 제278회

(1) 목적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육격차해소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교육투자우선지원사업’, ‘기초학력미달 제로 플랜’ 등 다양한 교육정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입안·시행하고자 제안되었다.

(2) 주요 내용

임해규(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의 취지로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지원사업이 유아,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학년 학생들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교의 범위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제2조 제5호와 제1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시책을 마련·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소외계층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또한 제11조(학습부진아 지원)의 대상자에 대한 규정 범위와 제12조(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에 대한 미비점이 제기되어 재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¹⁸⁾

(3) 의안 처리 결과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으로 「교육기본법」 제4조를 들 수 있으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학습부진아, 신소외계층 등에서 생겨나는 실질적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포괄하는 지원활동을 규정하는 직접적인 근거법률을 발의하였으나 대상 범위와 법적 근거 불비의 이유로 임기만료 폐기되

18)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11), 교육복지법안·교육격차해소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참고.

었다.

3. 제20대(2016~2020) 국회 발의 법률안

의안명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회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2016-08-02	전재수의원 등 21인	제20대 제344회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법률안	2017-11-02	송기석의원 등 18인	제20대 제354회

(1) 목적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히 실현하고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의 취지로 법안이 제안되었다.

(2) 주요 내용

교육의 균형발전과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전재수(안) 제9조(교육격차 실태조사 및 활용) 실에 따른 공개될 경우 학교 서열화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 우려와 제10조(교육격차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제11조(교육격차해소지구 지정), 제12조(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제13조(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제14조(교육격차 해소 우선학교 지정·지원)의 교육부장관이 교육격차발생 지역을 교육격차해소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에 대한 해당학교의 낙인화와 지구 밖의 학교 및 학생을 불합리하게 역차별하게 될 수 있음의 논의가 제기되었다.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요인에 따라 지역과 학교 그리고 학생 간 교육 기회나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송기석(안)은 지역·학교·학생 간 교육의 균형발전 도모(제1조)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교육감은 시·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제4조)에 대해 교육격차 해소 관련 정책은 다수의 부처 및 기관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에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 등의 다수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3) 의안 처리 결과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입법목적인 학생의 균등한 교육권 보장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학교·학생 간 교육 기회나 여건에 대한 차이를 극복하고자 법률안이 제시되었으나 교육격차 해소 관련 정책, 제도와 규정의 불비를 이유로 법안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4. 검토

제17대부터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었지만, 대상의 구체성 부족 및 법률안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최근 제21대(2020~2024) 국회에서 제안¹⁹⁾된 입학전형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더하여 사회통합전형으로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하자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종전의 특별전형인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을 하나의 입학전형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구분보다는 대입전형 체계의 간소화 및 명료화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함으로써 대안 반영 폐기(2021.8.19.)되었다. 이에 해당 제안회기 내에 입법 목적을 달성한 법률안은 없다.

교육불평등은 예전부터 사회적 이슈였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교육이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고착시키고 있다는 의견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에 국회에서는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양·질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불평등이 해소되어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IV.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교육격차 문제가 심화하면서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줄어들고 대면수업에서 원격수업으로의 진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불평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현재 진단과 해결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불평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5년 단위 계획을 세워 교육 불평등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을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힐 수 있도록 법으로 담보해야 한다”

19) 김승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2020.9.16.)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 촉구했다.²⁰⁾

현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표현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교육 분야에서의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혼재되어 어우러지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균형선발 및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분리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리교육이 계층별로 이루어지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교육은 인간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협소하게 만든다. 비교적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의 창의성 발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사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고 교사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냉소적인 반응이 돌아 올 수 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애정을 교사가 충족시켜 주어야 하고 사랑이 전제가 된 관심이 교육격차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3~4학년은 교과 과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방치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유전 형질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습에 큰 지장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조기개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조기개입을 언제부터 해야 하느냐에 관한 의견은 분분한데 최대한 일찍 개입을 할수록 더 큰 효과를 누린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취학기 이전의 아이들은 가정환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가정에서부터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나 교사의 재교육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 가난한 환경의 18개월 아이와 중산층 가정의 18개월 된 아이를 비교했을 때 인지능력이 3~4개월 정도 차이가 생긴다. 이는 의무교육 이외에도 초등학교 이전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에도 재정적인 금융수단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다. 조기개입에 공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비중이 훨씬 높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무상교육 시기를 가능한 한 당기고 아주 어린 시기부터 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가정의 소득형편에 상관없이 여러 조건들을 평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²¹⁾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등 산업구조 및

20)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2/2021012201559.html, 조푸름 기자, 조선예듀, 2021.01.22.일자 인터넷 기사 참조(검색일: 2022.5.23.).

21) 제임스 해커만의 해커만 등식은 0세~5세부터 아이의 교육에 개입하는 것이 평생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조기개입을 했을 때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면서 사회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각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한 놀이 등으로 조기개입이 필요한 것이지 사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예상되고 앞으로 교육에서는 단순 지식, 기술의 습득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창의성, 융합적 사고력 등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 예상되고 빠르게 변하는 직업 세계와 고용구조에 적응할 수 있는 진로 개척 역량, 연대 의식, 참여 의식을 갖춘 시민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미래사회에서는 출산을 저하, 학생 수 감소로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교육 여건을 미래형 교육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활용,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국가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²²⁾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아닌 표준화된 산업사회 인재상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교육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고교교육은 대학입시와 수능에 종속되어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 줄 세우기식 학생 평가로 인해 학생 상호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학생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교체계 다양화를 통해 교육과정 다양화를 추구하였으나 이는 서열화된 고교입시를 초래하였고, 특히, 일반고의 학생들의 학력과 학습 의욕은 저하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고 고교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교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고교 교육은 입시, 경쟁 중심 교육으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진로 개척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며,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입시, 수능 준비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모든 학생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하며, 학교 간 장벽을 낮춤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별 학교 내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도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제로는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한 교육격차해소 관련 법제로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교육 관계법령과 아동·청소년·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계법령이 있다. 다만,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이라는 연구의 범위 및 한계를 고려하면, 교육기

22) 중앙교육연수원, 고교학점제 관련 진로 및 학업 설계 역량 강화 연수(2020년 직무연수 자료)

본법, 유아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사회통합전형의 쟁점은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시 차등적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있다.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에 대한 전형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함에 있다. 그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학 간 편차가 있어 모든 대학이 최소한의 비율을 운영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사회배려대상자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고, 이에 장애인·저소득층·농어촌 학생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에 대한 전형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평가에서 ‘대학교육 기회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전형 운영’이 중요한 평가지표였으며, 고른기회전형 학생선발 규모와 선발방법 등이 정량 및 정성지표로 평가되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이 고른기회입학전형 선발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행해졌다.

하지만 각 대학의 여건 상 고른기회입학전형의 학생 수를 확대하는 것은 대학구성원들의 동의, 입학 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여건과 지금까지 선발했던 학생에 대한 성과분석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내려질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고른기회입학전형의 모집인원 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소폭 확대를 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들은 2017학년도 전형에서부터 일부 지원자격에서 인원수를 축소하거나, 일부 지원자격을 폐지하기도 하였다. 이는 대학이 고른기회입학전형의 모집인원 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수는 있으나 개별대학의 일부 지원자격의 인원 수정의 경우는 각 대학이 처한 여건과 성과분석을 통한 조정의 노력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고른기회입학전형의 경우, 대학자율적 기준으로 운영되는 일부 지원자격은 시대의 요구, 대학의 여건, 성과분석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계획되고 지원자격이 추가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른기회입학전형의 경우, 각 대학의 운영 성격에 따라 사회적배려자, 국가보훈대상자, 기회균형선발전형, 사회기여자, 사회공원자, 사회통합 등의 다양한 전형 명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각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자율적 기준의 다양성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지고 이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자의 입장에서 각 대학이 다른 전형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가진 전형만이라도 고른기회입학전형이라는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주는 것이 사회통합전형 신설의 초석을 만드는데 필요한 첫 작업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 교육’에서부터 ‘대학입시 간소화 및 고교학점제에서 성취평가제로의 로드맵은 대입전형을 대폭 간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자신의 흥미와 소질을 이해·개발하고 창의적·융합적인 사고력을 갖춘 전인적 인재의 양성과 발굴은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필수 요소이다.

둘째, 대입 환경 변화에 따른 고교와 대학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연계 강화를 들 수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고교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으로 수용도 높은 대입전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통합 차원에서 교육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교육 양극화와 경쟁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에게 고등교육기회 확대는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일정 비율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저소득층·농어촌학생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에게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4.10.28.보도자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교육위원회(2006.9.26.),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이주호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교육위원회(2006.9.26.), 교육격차 해소 법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에 관한 공청회.
교육인적자원부(2007.6.26. 토론회), 고등교육의 전략적 발전방안.
교육인적자원부(2007.11.13. 보도자료), 학력의 대물림에 의한 계층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기회균형선
발제 기본계획 확정·발표.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0), 교육복지법안·교육격차해소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2010.11.).
국회사무처(2019.7.8.), 제20대 국회 제369회(제2차) 교육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교육부(2019.11.28. 보도자료),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김성기(1997),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발전적 이해, 대학교육, 66~75.
이제봉(2009), 대학교육에서 기회균형선발제의 근거와 쟁점, 한국교육논단 제8권 제1호, 125~143.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2020), 대학입시와 진로·진학 설계.
Mickelson, R. (2002). Affirmative action in education. In D. Levinson et al., Education and
sociology: an encyclopedia (pp. 29~42). New York: Routledge Falmer.
McDonough, P. M. (1998). Structuring college opportunities. In C. A. Torres and T.
R. Mitchell(eds.). Sociology of Education: Emerging Perspectives. Albany: SUNY
Press.
부산일보(2009.1.11.), 대입 기회균등할당제 내용과 문제점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070627000227>
조선에듀(2021.1.22.). 교육계 안팎서 교육격차 해소 법안'촉구 이번엔 통과할까
http://edu.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2/2021012201559.html

투고일자 : 2022. 05. 30

수정일자 : 2022. 06. 28

게재일자 : 2022. 06. 30

<국문초록>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신설의 법적 함의 고찰

노 성

이 연구는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학의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고른기회입학전형의 법제화에 따른 국회 발의 법률안 내용 검토를 통하여, 대학 입학생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하여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국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에서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 이동성이 후퇴하고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학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고등교육법 제34조의8)하고자 하는 법률을 신설하였다.

이번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2022년 2월 22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정해진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사회통합전형, 차등적 보상의 원칙, 지역균형전형, 사회배려 대상자, 고른기회입학전형, 교육불평등 해소

